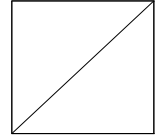


공개



의안번호	제 3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6. 4. 27. (제 6 회)	

## 지방 주도 과학기술 혁신 추진 현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제출 연월일	2026. 4. 27.



# 1. 의결(보고)주문

- 「지방 주도 과학기술 혁신 추진 현황」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

# 2. 제안이유

- 지방 주도로 지방 특화 과학기술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 역량 구축 및 중앙부처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

# 3. 주요내용

## < 핵심과제 추진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편화된 지방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 및 법사위 의결(4.22.)</li> <li>• '26상반기 내 제정목표</li> </ul>
지방과학기술진흥위원회 개편 추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을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에서 과학기술부총리 지방사대위원장 공동체제로 격상</li> <li>• 위원 구성을 관계부처 차관급 및 17개 시도 단체장으로 격상하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근거인 과학기술지문 회의법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완료(4.7.)</li> <li>• '26하반기 새 지방정부 출범 후 제1회 지방협의회 개최 예정</li> </ul>
블록펀딩형 지역 자율 R&D 신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17개 시도 단위, 중앙주도 공모 과제 방식을 4극3특 단위, 지역자율형, 통합적 대규모 R&amp;D로 전환</li> <li>•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과기·산업·중기부 중심으로 부처별 지역자율 R&amp;D 사업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년부터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li> <li>• '27년 중기부 합류 예정</li> </ul>

## □ 추진배경

- 그간 국가 R&D 투자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기획·분배에 집중되어 지방의 실제 산업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

- 지방이 주도적으로 R&D를 기획하고 중앙이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파편화된 관련 법령을 통합한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
- 지방 과학기술 정책을 심의·조정할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지방 주도 R&D 사업을 확대하여 정책 실행력 담보

□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현황

- (추진경과) 박충권<sup>(24.6)</sup>·조인철<sup>(26.2)</sup> 의원법안 발의 → 과방위 代案(병합·조정) 소위 의결('26.3.10.) → 전체회의 의결 및 법사위 회부('26.3.11.) → 부처 협의<sup>교육·행안</sup> 및 BH<sup>과기연구-교육</sup> 조율('26.3.18. ~ '26.3.26.) →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26.4.22.)
- (제정안 주요 내용) 분산되어 있던 지방 과학기술 정책·사업의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지방 주도의 혁신 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마련

\* 국정과제(26-5 지역자율 R&D지원으로 지역혁신역량 제고) 법안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편 추진 현황

- (추진경과) 지방협의회 운영 근거인 “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 완료(4.7.공포)
  - ※ 개정령 초안 확정 및 규제심사 완료('25.12) → 입법예고('26.1.2.~'26.2.11.) → 법제처 심사 완료('26.3.20.) → 차관회의 상정의결('26.3.27.) → 국무회의 상정의결('26.3.31.)
- (주요 내용)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편 및 기능 강화
  -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기능 확대를 위해 공동위원장 등 운영체계 개편

## □ 블록펀딩형 지역 자율 R&D 신규 추진

- (주요방향) '17개 시도 단위', '중앙주도공모과제' 로 지원하던 지역 R&D를 '4극3특 단위', '지역자율형', '통합적 대규모' R&D로 전환
  - 기존 지특회계(R&D) 내 부처별 지역자율 R&D 사업을 신설\*하고, 각 사업의 성과물이 다음 단계로 연계되는 '범부처 기술성장 사다리' 구축
- \*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술-산업-기업' 핵심축을 각각 담당하는 과기·산업·중기부 중심으로 기존 사업의 단계적 정비, 신규재원 확보를 통해 지역 자율 R&D 사업 추진
- (향후 계획) '26년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자율 R&D 모델을 검증하고, '기술개발-실증-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패키지 사업체계 완성('27)
-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심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7년 중기부 합류

## □ 기대효과

- 통합된 법적 기반과 격상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역 맞춤형 기술혁신 정책 실행
  -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R&D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도하는 자생적인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서 지방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과기, 산업, 중기부가 협력하여 기술-산업-기업으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의 핵심축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단절없는 R&D 성과물 연계 도모

## □ 향후 계획

-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완료('26.上)
-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 마련('26.下)
- 부총리·지방시대위원장 주재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26.下)

---

# 지방 주도 과학기술 혁신 추진 현황

---

2026. 4.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 추진 배경

- 중앙 주도형 R&D의 한계 및 지역 위기 극복
  - 그간 국가 R&D 투자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기획·분배에 집중되어 지방의 실제 산업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
  -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방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 시급
- ‘지방 주도성’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지방이 주도적으로 R&D를 기획하고 중앙이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파편화된 관련 법령을 통합한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
  - 지방 과학기술 정책을 심의·조정할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지역 주도 R&D 사업을 확대하여 정책 실행력 담보

## II.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현황

- (추진배경) 중앙집권형 R&D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자생적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및 책임있는 지방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지방 주도로 지역 특화 과학기술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 역량 구축 및 중앙부처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 (추진경과) 박충권<sup>(24.6)</sup>·조인철<sup>(26.2)</sup> 의원법안 발의 → 과방위 代案(병합·조정) 소위 의결('26.3.10.) → 전체회의 의결 및 법사위 회부('26.3.11.) → 부처 협의<sup>교육·행안 및 BH</sup>과학기술연구-교육 조율\*('26.3.18. ~ '26.3.26.) →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26.4.22.)
  - \*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체계(RISE)와의 연계·협력을 위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구성 협조 등

- (제정안 주요 내용) 분산되어 있던 지방 과학기술 정책·사업의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지방 주도의 혁신 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

\* 국정과제(26-5 지역자율 R&D지원으로 지역혁신역량 제고) 법안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기본계획 수립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5년)
중장기 투자전략	지역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5년)
논의실행기구 설치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설치·지정
사업 관리체계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정·관리 및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기획·추진 근거 마련
전문기관 육성	지역공공연구기관 육성 및 지역대학·지역기업연구소 지원 근거 마련
지역 협력 강화	산학연 협력 및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및 상호연계 정책 추진
전문인력 양성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지원체계, 지역과학기술정보 관리체계 구축

- (의의) 기존 중앙 중심의 R&D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 맞춤형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확고한 제도적 틀 마련
- (향후계획) 본회의 통과 → 법률안 공포 및 시행령 제정

### III.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편 추진 현황

- (추진배경) 기존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지방협의회”)는 관계부처 및 지방 정부의 소극적 참여로 지역 현안의 협의·조정 및 논의 안건의 이행력 확보에 한계

\* 재적위원 총 25명의 제1회부터 제7회까지의 평균 대참률은 78% 수준으로 과도하게 높아 형식적 의결구조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체계의 개편 필요

- ☞ 새로운 균형성장 패러다임으로 5극3특 전략\*이 제시되며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지방협의회의 기능 확대 필요성 증가

\* 중앙주도 자원배분 및 시도단위 단절적 지원방식을 5극3특별 자율책임 기반 전략으로 전환

- (추진경과) 지방협의회 운영 근거인 “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 완료(4.7.공포)
  - ※ 개정령 초안 확정 및 규제심사 완료('25.12) → 입법예고('26.1.2.~'26.2.11.) → 법제처 심사 완료('26.3.20.) → 차관회의 상정의결('26.3.27.) → 국무회의 상정의결('26.3.31.)

□ (주요 내용)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편 및 기능 강화

-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기능 확대를 위해 공동위원장 등 운영체계 개편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편 >

구분	현 황	개 편	비 고
위원장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	과학기술부총리 및 지방시대위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
위원구성	중앙정부(관계부처* 실장급) 지방정부(17개 시·도 부단체장) * 과기정통부,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지방시대위원회	중앙정부(관계부처* 차관급) 지방정부(17개 시·도 단체장) * 과기정통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li> <li>•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사업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버넌스) 부처별 개별 지역사업 검토 조정연계하여 권역별 맞춤형 지원 설계</li> <li>• (예산) '26년 이후 블록편당형 지역자율 R&amp;D 예산 편성·배분 논의</li> <li>• (정책)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검토·심의, 연도별 시행계획 검토</li> <li>• (성과관리) 지역자율 R&amp;D 사업의 성과 점검 및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li> </ul>	지방협의회 운영세칙 개정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주기 : 반기별 1회(원칙)</li> <li>• 운영체계 : 민간자문위·사무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주기: 반기별 정기회 + 수시</li> <li>• 개최장소: 지역 현장 중심</li> <li>• 운영체계: 실무팀*·사무국 운영</li> </ul> <p>* 17개 시도 국장급 공무원, 산학연 민간위원 참여</p>	-

- (향후계획) 새 지방정부 출범(7.1) 이후 제1회 지방협의회 개최 예정

**IV. 블록편당형 지역 자율 R&D 신규 추진**

- (주요 방향) '17개 시도 단위', '중앙주도·공모과제'로 지원하던 지역 R&D를 '4극3특 단위', '지역자율형', '통합적 대규모' R&D로 전환

- 기존 지특회계(R&D) 내 부처별 지역자율 R&D 사업을 신설\*하고, 각 사업의 성과물이 다음 단계로 연계되는 '범부처 기술성장 사다리' 구축

\*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술-산업-기업' 핵심축을 각각 담당하는 과기·산업·중기부 중심으로 기존 사업의 단계적 정비, 신규재원 확보를 통해 지역 자율 R&D 사업 추진

< 현행 >		→ 개편, 확대	< 구조 개편 예시 >				부처 합계
소관 부처	'25년 예산		구분	지역			
과기정통부	4,541억	지역자율 사업(과기)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중부권	5,000억
산업부	1,291억	지역자율 사업(산업)	400억	300억	100억	500억	
중기부	1,294억	지역자율 사업(중기)	300억	500억	200억	200억	
농진청	82억				700억	300억	3,000억
행안부	56억						
국토부	50억						3,000억
해수부	4억						
합 계	7,318억원	합계	1천억	1천억	1천억	1천억	
			약 1.1조				

- 지역의 변화와 성장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정성 평가 및 평가위원 간 토론을 통해 평가하는 맞춤형 평가 도입

\* 산업변화(신산업 비중 및 기업 수 증가), 고용 및 인재 변화(고용창출, 정책 연구자), 투자 유치 및 기업 성장(민간 투자 유치, 기업 매출 및 고용 성장), 정책 및 지역 연계 등

- (향후 계획) '26년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자율 R&D 모델을 검증하고, '기술개발-실증-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패키지 사업체계 완성('27)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심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7년 중기부 합류

## V. 기대효과

- 통합된 법적 기반과 격상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역 맞춤형 기술혁신 정책 실행
  -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R&D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도하는 자생적인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서 지방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과기, 산업, 중기부가 협력하여 기술-산업-기업으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의 핵심축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단절없는 R&D 성과물 연계 도모

## VI. 향후 계획

-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완료('26.上)
-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 마련('26.下)
- 부총리·지방시대위원장 주재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26.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전략과	
담당자	노수정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2-6734 E-mail : n5crystal@korea.kr